

하이테크 시대 출판의 미래

고전적 출판기능 확보, 적극적 뉴미디어 참여 등이 대안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90년대초만 해도 '구텐베르그의 시대는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얼마쯤은 유효적이었다. 올드 미디어의 대표적인 출판의 역사는 수백년을 넘는 것이고, 따라서 책을 읽고 만지고 살아온 인간의 감수성이 뉴미디어가 나타난다고 해서 순식간에 축소되거나 사라질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몇년 지나지 않은 오늘날, 구텐베르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고작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가.

출판관행의 근본적인 변환 시작

1994년 봄학기 미국 코넬대학에서는 구내 복사점에서 3천5백만 페이지가 복사되었다. 이는 대학생들마저 거의 텍스트 북 자체를 사지도 빌리지도 않으며, 오직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교과서 대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버드나 콜롬비아대학 같은 저명한 대학도 오래 유지해온 대학 출판부 작업을 거의 중지하고 있다. 논문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고 당연히 컴퓨터 화면으로 논문을 읽고 복사해 가질 수 있다. 굳이 책으로 출판해 보았자 경비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책으로 내든 말든, 나의 논문을 DB에 넣지 않겠다는 교수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법에 '자기(自己)정보입력거부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 안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 해도 입력을 거부했다는 조건이 곧 출판의 가능성을 뜻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항이 출판의 지속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 출판사인 맥밀런사는 지난해부터 고급도서들은 아예 주문부수에 한해 인쇄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책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니고 책을 간행할 준비는 하되, 준비돼 있는 책의 내용을 선전하여 독자 주문으로 확인된 것만 대략 1백부 단위로 찍어주겠다는 방법이다. 이것은 출판관행의 근본적 변환을 의미한다. 발행의 개념으로부터 주문에 응하는 인쇄서비스의 개념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과 이에 대한 부분적 대응들을 우리는 이제 출판체제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

다. 주문배수 형식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한다. 어떤 것인가, 약간의 전제를 통해 접근해 보자.

출판의 효용은 크게 나누어 정보·오락·교양에 있었다. 이중 오락도서는 이미 뉴미디어의 환상적인 기능들에 의해 침식이 끝나가고 있다. 교양도서들도 상당 부분이 같은 처지에 도달했다.

미국 출판자료를 읽으면 이제는 '문학적 표현'으로 쓴 소설은 아예 출판사가 접수하지도 않는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영국 출판인의 영국식 표현을 빌리면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저자는 요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의 의미는 분명하다. 컴퓨터 읽기는 책으로서의 읽기와는 전혀 다른 읽기 분위기와 양식을 만들어내고 이미 시장(市場)을 조정해갈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도서의 사용은 더 따질 것도 없이 컴퓨터의 DB와 네트워크가 우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드미디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출판은 '고급도서' 뿐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말해왔다. 텍스트 북, 일반적인 도서들 가운데 보다 고전적인 목록들, 또는 아주 잘 인쇄된 화집들, 사진집들, 역사서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책이라는 그 자체의 창조품으로 아끼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논리적인 소망이었다.

그러나 이 고급도서들마저 뉴미디어 속에서 그 보급의 방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맞게 됐다. 즉, 주문배수체제라는 것은 제품은 '고급도서'이지만 발행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정보'로 존재하므로 이마저도 정보적 도서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보화'란 언뜻 생각하면 수요창출의 방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급도서의 수요에 있어서는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손에 쥐고 만져 보면서 충동구매로 더 잘 이루어진다는 수요양식을 간과해선 안된다. 컴퓨터 정보화면에서는 결코 충동수요가 확대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오늘날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간의 법적 입장은 매우 특별한 난제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며 발전하는 하이테크 속에서 '정보'의 법적 정의가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조약·협약·규제·권고들에 있

하이테크구조에서 출판발행은 사실상

와해의 단계에 와 있다는 우려를

느낀다. 정보는 DB에 저장됨으로써

서비스로 인식되며 전자출판에서도

백과사전류 정도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DB속으로 합류되는 실정이다. 이제

출판은 두 가지의 저항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 고전적인 책을 만들거나

멀티미디어 제작에서의 출판영역을

보다 분명히 하고 참여하는 일이다.

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입법은 우선 정보 시장을 개방하거나 규제하거나 그 어느것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유통을 돕고,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지원하는 것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 속에서 정보의 내용 자체는 서비스 개념으로 파악된다.

유럽인권법에서도 정보 및 TV 등으로 방송된 내용은 상품적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비스 범주의 행위로 규정한다. 이것은 현 뉴미디어체제에서 정보상태는 곧 독립된 제품이 아니며 동시에 저작권의 입장은 묵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 도서'는 곧 서비스의 범주

오늘의 저작권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DB에 저장되면 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 사용료의 적정성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어느 출판물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느냐 아니냐, 또 얼마쯤을 소유했느냐를 식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보로 수용한 뒤 출판물을 사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아마도 거의 더욱 사지 않을 것이다.

하이테크구조에서 출판의 발행을 기능적으로 중지하고 주문배수하겠다는 접근은 현단계로는 출판사의 경영합리화처럼 보일지 모르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출판행위 자체를 축소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종합한다면 올드미디어적 출판의 입장은 사실상 와해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느낀다.

현단계에서는 전자출판도 출판이다. 출판

은 전자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확실해졌다. 미국에서 제작, 꽤 시장성이 있었던 CD-ROM 4천종 중 3천종을 앞으로 더 팔 수 없다는 판정하에 폐기처분한 일이 올해 초 일어났다. 전자출판에서도 백과사전류 정도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소재는 결국 DB 속으로 합류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정이다.

고전적 출판이 저항한 두가지 길

고전적 출판은 두가지 저항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보다 더 올드미디어적으로 제작·발행·판매하는 책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매까지 포함하는 것은 판매를 뉴미디어에 맡기면, 그것만으로도 뉴미디어적 관점에서는 저작권 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고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앞서 말한 '자기 정보입력거부권'까지 행사해야 함을 뜻한다.

또하나의 노력은 멀티미디어 제작에서 출판이 맡아야 할 부분을 보다 분명히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예컨대 최근 대부분의 영화는 소설로 먼저 선보이는 과정을 갖는다. 즉 영화 아이디어를 소설로 써서 시장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설 제작비가 다른 형식의 자금사용보다 가장 적게 드는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만들어본 뒤 성공하면 소설로도 팔겠다는 생각은 이제 돈 계산만으로도 무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책으로 참여할 멀티미디어의 부분을 찾아야 하고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접근 모두를 저항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싶다. 이 방법마저 출판 영역의 전문성으로 찾지 않으면 대중은 뉴미디어적 영상적 감수성만을 점점 더 빨리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책이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가치는 사실상 지난 몇백년간 책을 교육의 도구로 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백년간 이 책의 감수성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교육매체를 뉴미디어로 바꾸고 있다. 2, 30년만 이 상태가 진전되어도 책의 효용과 가치는 오늘날만큼 중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처럼 교육제도 자체가 스스로 읽기 교육을 일찍이 포기하거나 파괴한 나라에서는 더 빨리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